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
【2022. 11. 23.(수) 1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1월 23일
전문위원 배 금 택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2 - 127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2년 11월 7일
- 라. 회부일자: 2022년 11월 11일

2. 제안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11.19.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¹⁾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1)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제2조)
- 나. 협력체계 구축 및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안 제3조, 제4조)
- 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안 제5조)
- 라. 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안 제6조)
- 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 의: 해당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10. 4.~10. 24.)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기획예산과):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개선의견 수용
 - 제4조 실태조사 시 성별, 연령을 분석단위로 포함 내용 반영
 - 제5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 고려 사항 반영
 - 제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성별고려 사항 반영

5.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2021. 5. 18. 개정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강서구의 각종 산업재해²⁾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고 노동 복지를 향상 시키고자 제안됨.

나. 주요 제정내용

○ 협력체계 구축(안 제3조)

-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 규정 (안 제4조~제5조)

-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정책개발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추진하여야 할 사업들을 명시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 13. 생략

○ 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6조)

-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활동 등을 수행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 제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그 세부사항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청도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 구역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한 것이나, 이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의견

- 서울지역 전체 임금노동자 중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의 규모가 38.5%(2021)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한 해 2천명 이상(2020년 2,06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노동의 질과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 최근 SPC 평택공장 끼임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일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다만, ‘노동자’의 적용대상 및 ‘노동안전보건’의 영역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사업장 내 현업 노동자뿐 아니라 다양한 근로환경과 고용형태에 따른 적용대상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기존 제도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산업재해 발생관련 자료 (21년 산재 사망사고 세부 현황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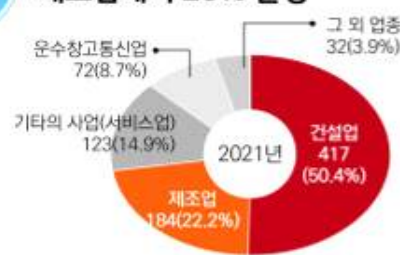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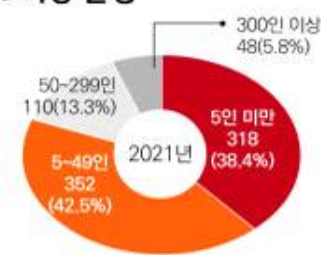
사고사망자 828명,
사고사망만인율 0.43으로
사고사망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



건설업에서 절반 이상,
제조업에서 20% 발생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80% 이상 발생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추락·끼임에서 절반 이상 사망



60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4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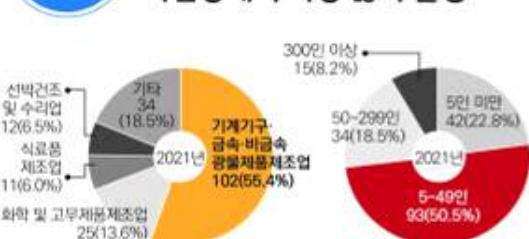
사고사망자 중 외국인 노동자는
12% 수준



건설업 사망자는 1~50억원 미만
공사현장, 건축·구조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



제조업 사망자는 기계기구·금속·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5~49인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수요 증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퀵서비스기사' 사망사고 증가 추세



□ 최근 5년간 기초지자체별 사고사망 현황

광역	기초	사고사망자(명)							사고사망만인율(‰)		
		'17 년	'18 년	'19 년	'20 년	'21 년	증감	5년간 합계	'20 년	21 년	증감 (%pp)
총계	전국 총계	964	971	855	882	828	△54	4,500	0.46	0.43	△0.03
서울	서울 소계	111	83	66	85	66	△19	411	0.19	0.15	△0.04
서울	종로구	5	2	1	2	5	3	15	0.08	0.20	0.12
서울	중구	4	2	0	4	3	△1	13	0.10	0.07	△0.03
서울	용산구	1	4	2	2	1	△1	10	0.14	0.07	△0.07
서울	성동구	5	4	4	6	4	△2	23	0.38	0.24	△0.14
서울	광진구	5	3	1	2	4	2	15	0.23	0.46	0.23
서울	동대문구	3	3	1	1	3	2	11	0.11	0.32	0.21
서울	중랑구	1	3	4	0	0	0	8	0.00	0.00	0
서울	성북구	8	2	2	2	4	2	18	0.25	0.47	0.22
서울	강북구	1	0	3	0	0	0	4	0.00	0.00	0
서울	도봉구	2	2	1	1	0	△1	6	0.21	0.00	△0.21
서울	노원구	2	1	0	0	0	0	3	0.00	0.00	0
서울	은평구	4	3	0	5	1	△4	13	0.75	0.14	△0.61
서울	서대문구	8	4	1	2	2	0	17	0.25	0.24	△0.01
서울	마포구	3	3	1	5	2	△3	14	0.23	0.09	△0.14
서울	양천구	4	2	2	3	3	0	14	0.36	0.37	0.01
서울	강서구	9	11	5	8	7	△1	40	0.38	0.32	△0.06
서울	구로구	4	2	4	0	3	3	13	0.00	0.19	0.19
서울	금천구	3	1	6	5	2	△3	17	0.27	0.10	△0.17
서울	영등포구	7	3	7	12	2	△10	31	0.35	0.06	△0.29
서울	동작구	5	1	0	3	1	△2	10	0.37	0.12	△0.25
서울	관악구	3	3	2	3	2	△1	13	0.39	0.25	△0.14
서울	서초구	7	6	5	5	4	△1	27	0.12	0.10	△0.02
서울	강남구	5	7	7	7	5	△2	31	0.10	0.07	△0.03
서울	송파구	11	4	3	3	7	4	28	0.10	0.24	0.14
서울	강동구	1	7	4	4	1	△3	17	0.34	0.09	△0.25

※ 사망만인율(%):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업무상사고 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개정 2020. 5. 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제3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3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39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社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